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기본과제	과제책임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조영진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 및 정책개선	임현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윤주선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방안 연구	박성남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 분야 활용방안 연구	조상규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시설기준 개선 방향 연구	고영호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신치후
건축물 안전강화 규제정책 합리화 연구	김은희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이종민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김상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 분야 대응방향 연구	손동필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 체계 연구	김승남

기본과제

❶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최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 안전 역시 건축물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이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범죄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일정용도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의 개정을 통하여 별도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도록 2015년 4월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현재 시행 중인 고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경우 사유재산이며 공간적으로는 사적 영역에 해당되어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영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주·건축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인 영국과 일본에서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우수 건축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 범죄 안전을 위한 건축물 요소별 디자인 성능기준을 수립하고,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며, 범죄 안전 우수 건축물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건축물 범죄 예방 환경설계 선행이론을 검토하고, 국내외 건축물 성능제도와 사례를 조사·분석하며, 이를 종합하여 한국형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기준을 수립한다. 수립된 성능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우수 범죄 안전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축물 범죄예방 정책의 수립 및 정비에 물론 건축물 범죄예방 디자인 성능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요소별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 심의 등의 평가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진

②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 및 정책개선

최근 교육·문화·복지 등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 요구가 높아지고 지역민의 교류 중심으로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심의 경우 높은 지가와 신축 가능한 개발지의 부족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권 인근에 공공서비스 시설을 우선 공급하거나, 유휴 공공건축물을 주민 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민간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국공유재산 간의 상호 교환과 위탁 개발을 통한 시설의 복합 개발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사업 방식과 절차, 제도적 한계,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화 사업보다 매각 처분이나 단순 이용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추진 프로세스 및 지원 체계)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의 추진 원칙을 정립하고 사회적 효과를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공공건축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임현성

③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국비지원 도시재생 사업이 2014년 13곳에 이어 2016년 33곳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 지자체 사업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사업 추

진 체계가 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 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은 크게 '주체'적인 측면과 '주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시 공간적 제약으로 사업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 참여자가 한정된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은 행정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행정상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마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은 다양한 사업 주제를 장소 중심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앵커사업과 함께 저예산 단기간의 소규모 사업이 문화·경제·관광·도시건축·복지·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기존의 발주방식으로는 각각의 사업주체에 맞는 사업실행 주체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2010년대 들어 다수의 콘텐츠를 소량으로 공급하는 현대 사회의 추세에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O2O(online-to-offline)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경계 없는 참여와 소비자-공급자 간의 직접적인 연계 플랫폼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등 세계적 O2O기업의 가치가 각각 680억 달러와 25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에서도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직방' 등 O2O 서비스가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과 잠재력은 다양한 사업 주체와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와 주제 측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O2O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주선

④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방안 연구

전국의 공·폐가는 약 79만 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장기 방치된 공·폐가로 인해 우범지대 양산 등 사회문제와 도시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 제정된 일본의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참고하여 2016년에 '빈집특별법(안)'을 입법할 계획이며, 3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 개량자금' 예산을 활용해 공·폐가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는 등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단계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 현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주거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 등 중앙정부 주도의 공·폐가 다발지역 재생 연계 사업과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시 '햇살둥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여건, 잠재력과 제약요소 등 지역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거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공·폐가 재생의 구체적 실행전략 및 수단 제시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공·폐가 재생 제도 기반 구축과 맞추어 쇠퇴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 특성, 쇠퇴 지역 인구 구성, 토지 이용 및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폐가 재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 지역 실증 연구를 통한 공·폐가 재생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공·폐가 재생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공·폐가 재생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재생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공·폐가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종합하여 국내 공·폐가 재생의 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성남

⑤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분야 활용방안 연구

정부는 녹색건축 보급·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15년에 완료하고 운영단계로 전환하였다.

녹색건축정책의 출발은 에너지 및 환경정책이다. 나아가 녹색건축은 환경규제가 아닌 창조경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녹색건축 신산업 육성은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건물에너지 정보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는 이와 같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는다. 국가건물에너지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자료구조 해석 및 처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건물에너지 데이터는 건축물대장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연계성 정립이 필요하며,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건축물 현황정보는 공간정보화 등의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건물에너지 데이터 활용에 공공·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건물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처리기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국가건물에너지 데이터는 녹색건축정책의 성과평가, 부동산데이터와 연계한 건물에너지 성능 공개, 건물에너지 절감사업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사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처리기법을 적용하여 건물에너지 사용정보의 공공·민간 개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상규

⑥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시설기준 개선 방향 연구

2014년 메르스(MERS) 사태와 같은 호흡기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과정은 국내 의료 인프라와 관련 기준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의료시설 내 집단 2차 감염은 부적절한 공조 및 환기설비 시스템, 격리병실의 동선 분리 미흡, 충분한 음압병실 및 음압유지시스템 미확보

등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호흡기 감염에 쉽게 이환될 수 있는 환자군이 증가하였고,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의료 시설 내 감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시설 계획기준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여러 부처의 법령에 혼재되어 있어 규정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미약하고, 호흡기감염병 질환을 고려한 시설계획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시설 계획기준 및 규정의 종합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흡기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의료시설기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에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경로 및 감염 관리체계와 국내외 의료시설 계획기준 및 현황,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 의료시설의 건축·설비 계획기준과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병원이라는 다중이용시설 성격의 건축물에 관한 특성과 이에 관한 건축계획 및 설비계획의 종합적 검토와 현장조사를 반영함으로써 의료시설 내 2차 호흡기감염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계획기준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개편을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시설 내 2차 호흡기감염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한다.

고영호

7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주거로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민간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에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나 검증되지 않은 지원 방법으로 인하여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약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한옥마을 조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옥마을 조성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은 현재의 분양과 관련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택지개발사업 관련 법, 분양조건 및 절차 등이 현대건축물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한옥마을 분양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옥마을 조성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지역 및 농산어촌지역과 같은 지역 특성이나 주거전용, 불특정 단독주택용지·집합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원형지와 같은 용지 특성과 더불어 용도지역, 지구계획 등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없이 획일화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전국적으로 비슷한 모습의 한옥마을을 양산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옥마을 조성사업 조성계획과 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성과 수요자 특성을 반영하는 한옥마을 조성사업 검토 및 계획 수립 방향과 지원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치후

8 건축물 안전강화 규제정책 합리화 연구

2014년 경주 마우리나 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등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건축물 붕괴사고의 경우 2010년 175건, 2011년 253건, 2012년 286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화재사고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4만 2,134건 중 2만 5,821건(약 61%)이 건축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15차례에 걸친 건축물 안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보다 근원적인 건축물 안전강화 정책 수립과 규제 실행의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조치 대안으로서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이미 실행 중인 정책 및 법제도 간 상관성 분석과 해당 규제에 따른 산업·경제적 영향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를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내용 및 정책적 대응방법과 관련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영향성을 조사·분석하며, 종합적인 정책으로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원인과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또한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근 시행 예정인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주요 규제의 주안점과 타 분야 상관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한 건축물 조성과 이용을 위한 패시브·액티브(Passive & Active)적 규제 체계를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건축단계별 규제 차별화를 통하여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향을 보다 원활히 하는데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타 분야 정책과의 유연한 관계 검토 속에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희

9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유휴공간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우범지대화 되는 등 지역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을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휴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공간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여 또다시 유휴공간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변화하는 공간이용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인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추구해 온 영구성(Permanence)과 하향식 계획과는

상반되는 전술적 도시론(Tactical Urbanism), 일시적 활용(Temporary Use) 등 자발적이며 일시적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유휴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주체별(소유자, 사용자, 공공 등) 역할을 정립하여 유휴공간의 일시적 활용의 제도화 방안과 실행 수단을 마련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민

10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어린이집은 0~5세의 어린이가 부모와 가정을 벗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교육기관이자 영·유아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2013년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3~5세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육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기능 보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이자 새로운 보육프로그램을 실현할 보육공간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면적 등 규모 기준, 안전 기준 등 특정항목에 대한 최소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 환경에 대한 정성적 지침은 설계용역 발주 시 개별시설별로 과업지시서상에 제시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급격히 확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조성체계 및 설계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기준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및 전문가 인식조사·현장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국공립어

린이집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 일관된 설계지침이 운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김상호

1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 분야 대응방향 연구

2015년 9월 25일 193개국 정상들이 모인 UN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 189개국의 정상들이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향후 15년의 개발목표이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과 및 비만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UN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과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 몇 년 동안 논의된 후 수립되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대 목표, 17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목표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장려’(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와 목표 11 ‘포용적인, 안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은 건축 및 도시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국내 현황 및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목표에서 국내 건축·도시 분야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 요소들이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적절한 미래예측 방법론을 통하여 예측하며, 이를 토대로 건축·도시 분야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손동필

12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 체계 연구

가로환경은 도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도시설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공간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가로기반 도시계획(Street-based Urbanism) 제도와 정책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제도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가로경관의 질적 수준 제고효과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현장중심’ 가로환경 평가 방식은 다양한 한계를 갖는다. 근본적으로 소수 전문가의 역량과 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평가 대상지가 다수인 경우, 이를 동시에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중심’ 가로환경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상정보’ 기반의 가로환경 평가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가로환경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검토하고 관련 개념을 정립한다. 아울러 영상정보의 유형과 가로환경 평가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이는 크게 ①대표가로 선정 ②인터넷 가로뷰 서비스를 활용한 대표가로 사전조사 ③대표가로 현장조사 및 동영상 촬영 ④전문가 패널에 의한 대표가로(동영상) 평가 ⑤계량분석을 활용한 가로 특성과 가로 평가결과의 관계 분석 ⑥동영상 평가에 기반을 둔 가로환경 평가기준 정립 순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평가체계가 기존 평가체계를 실제 가로에 시범 적용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검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평가체계가 전문가에 의한 현장 중심 평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로환경 평가의 대상과 필요성의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전문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보완도구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승남

2016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사)한국 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2월26일, 서울 현대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함께 '존중받는 생로병사를 위한 환경적 모색: 출산환경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물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 경제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출산환경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선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존중받는 생로병사를 위한 환경적 모색'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출산환경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주제발표는 '임신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소영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보건의료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적절한 분배와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조영미 실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의료화된 출산환경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주제로 기존 병원 환경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여성의 권리와 출산환경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우성 소장(온고당 건축사사무소)은 산부인과 병원의 계보와 고급 산부인과 병원의 등장, 관련 전문 서비스를 위한 차별화된 공간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여성병원의 변천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선영 교수를 좌장으로 3명의 발제자와 김상호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장지인 교수(홍익대학교)가 패널로 참석하여 출산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사회적 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40여 명의 건설 분야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출산환경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출산환경의 현재를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백혜인

2016
제1차
지식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1월 29일 '중국 복건성 공동주택'이라는 주제로 2016년 제1차 지식강연회를 열었다.

지식강연회는 연구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구사례를 접할 수 있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비롯하여 '정부3.0교육', '연구윤리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등이 월별로 진행되고 있다.

강연자 최종현 소장(사단법인 통의도시연구소)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후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통의도시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강의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옛 사람 발길을 따라가는 우리 건축 답사1·2』(2010), 『남경에서 서울까지』(2012), 『오래된 서울』(2013), 『나무와 풍경으로 본 옛 건축 정신』(2013)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강연은 '중국 복건성 공동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강의 내용은 현장답사 때 촬영한 사진들이 활용되어 푸젠성(복건성) 토루를 접하지 못한 연구원들에게 그곳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적 건축양식과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번 제1차 지식강연회는 획일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유형과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동주택 양식이 개발된 중국의 사례를 이해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자리였다.

이소영

news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서울시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지난 1월 28일 서울시와 '한옥문화의 계승 및 한옥정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와 함께 현장기반형 한옥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한옥산업화를 위한 관·산·연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한옥자산 보전·진흥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2011년 5월 설립 이후 한옥지식 체계화와 정책 및 산업 지원, 한옥문화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2015년 7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센터로 지정되었다.

한편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2015년 9월 개소하여 현장 출동 한옥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한옥 교실·한옥캠프를 개최하는 등 한옥 보전과 한옥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센터는 한옥장인과 함께 한옥119 출동 및 실태 점검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교육홍보 등 한옥자산 보전·진흥과 관련한 서울시 시책개발 및 공동업무 진행에 상호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옥실태조사, 한옥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한옥수요와 건축동향 파악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한옥산업화를 위한 농림부·산림청 및 관련 산업체 등과 한옥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옥 현대화 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한옥장인·민간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자 입장에서 한옥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한옥과 관련한 환경·산업·건축방식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한옥주거지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경



* 이미지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한옥에서 1박 2일, 27-28일 서울한옥캠프 개최”, 2015.11.2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웨덴
민정위원회에
한국 주택정책 소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과 2인의 부연구위원은 지난 2월 18일 주한 스웨덴 대사, 스웨덴 국회 민정위원회*와의 회의에서 한국 주택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소개하였다.

스웨덴 민정위원회 위원장 캐롤라인 쉬베르(Caroline Szyber) 외 9인의 위원은 한국의 도시개발, 주택시장 관련 정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2월 14일 방한하였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한 스웨덴대사 안 회그룬드(Anne Höglund)와 함께 민정위원회 위원단과 만나 한국 주택시장의 흐름과 발전 방향, 정부의 주택 관련 시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익 소장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주택공급과 수요의 변화, 주택정책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뉴타운 개발사업과 서울 광역도시권의 형성 ▲주택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대한민국 고유의 전세·반전세 주택임대 시스템 ▲기업형 임대주택 프로그램 ▲주거급여 프로그램 등 관련 주요 이슈와 정부 시책을 설명하였다.

이후 한국 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스웨덴 민정위원회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스웨덴은 누적된 이민자와 국제난민 수용을 위해 현재 대형 주거지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국의 대형 아파트단지 개발과 아파트단지의 노후 관리 및 거주자 만족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가소유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주거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의 전세·반전세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스웨덴 민정위원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국가의 건축·도시정책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고영호

* 결혼·상업·토지 등 일반적 사법의 성격을 지닌 사건과 관련된 법률을 담당하는 스웨덴 민정위원회(The committee on civil affairs)는 주택정책, 토지개발계획, 건설 및 건축, 주택 제공 등의 분야를 다룬다.

건축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 운영 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규제 관련 의견 접수와 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을 할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2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는 지자체별 건축규제 정보, 규제개선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제출한 신고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의 검토를 거쳐 관련 부처로 전달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며, 신고자가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해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지자체 건축임의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현장 모니터링을 벌여 지자체 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2016년에도 모니터링과 심의제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소현



사진과 도면을 곁들인 일대기 『와본 김동현 구술집』 발간



남대문 화재사건,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등 최근 문화재 관련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문화재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관리 영역이 아닌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와본 김동현 구술집』은 우리나라 초기 문화재 발굴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하고자 기획되었다.

와본 김동현 선생은 법주사 팔상전과 봉정사 극락전 해체, 천마총, 황남대총, 황룡사 발굴, 불국사, 미륵사 동탑 복원 등 많은 설계 활동에 참여한 우리 건축문화재 보존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와본 김동현 구술집』은 전통건축연구모임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채록한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한옥센터가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일대기 형식으로 재편집한 책이다. 2007년 당시 구술채집에 참여한 김동현 경기대학교 명예교수가 직접 해설을 맡았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가한옥센터에서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전산화한 사진과 도면 등 김동현 선생 개인 소장자료를 곁들여 더욱 풍부한 내용을 전달한다.

초창기 문화재 발굴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인물과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기대하며, 연구자 및 실무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옥 외부설비 정비 가이드 『한옥 고치는 책 III』 발간

『한옥 고치는 책 III』은 한옥의 외부공간을 다룬 책이다. 주거는 다분히 사적인 공간이지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사유재이면서 동시에 공공재로 취급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한옥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외부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책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가운데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살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마당, 대문, 담장과 외벽, 배관 및 계랑기 등 외부설비의 4개 장으로 구성되며, 글보다는 사진과 도면을 중심으로 시공 전후의 모습을 수록하였다.

『한옥 고치는 책』은 2013년 제1권을 시작으로 올해 시리즈 완간을 맞았다. 『한옥 고치는 책』의 주요 독자는 한옥거주를 희망하는 국민들과 현재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한옥의 고유한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종래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통해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데 이 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박민정